

고령층 백신 4차...사전 예약률 달랑 19%

260만9808명 예약...93만7520명만 4차접종 완료 당국 "3차접종 고령층 중증·사망 예방효과 감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 중 4차 접종을 예약한 인원은 약 261만명으로 집계됐다. 예약률은 19%다.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예약률이 30.4%로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60세 이상 인구 1374만3932명(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중 4차 접종 대상자는 1074만6260명이다.

이 가운데 260만9808명이 사전예약에 참여했다. 예약률은 인구 대비 19.0%, 대상자 대비로는 24.3%이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을 25일부터 시작했다. 의료기관에 남은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이보다 앞서 14일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4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93만7520명이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6.8%이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예약률이 30.4%(245만5738명 중 74만7379명)로 가장 높았다. 70대 25.8%(388만3747명 중 100만2991명), 60대 11.6%(740만4447명 중 85만9438명)

이다. 정부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려면 4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60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비율은 4% 내외다. 그러나 사망자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4.4%로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위중증 환자의 약 86%, 사망자의 약 94%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은 약 61%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2월26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1295만98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 대비 3차 접종자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5.5배,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4배가 높다.

이스라엘에서의 '3차 접종과 4차 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medRxiv)'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 접종 후 사망률 대비 4차 접종 후 사망률은 60대 0.16%, 70대 0.28%, 80~100세 0.20%로 4차 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승인해 실시하고 있으며, 4차 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여수경찰, 닛소남해아그로㈜와 마을자위방범용 CCTV 기증식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21일 여수시 창촌마을회관에서 닛소남해아그로㈜ 대표이사 한배호, 모도동 2동장 허충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방범용 CCTV 기증 행사를 가졌다. 여수=오상호기자



나주 금성지구대-나주신협, '안전한 나주만들기' 업무협약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최근 '안전한 나주만들기'를 위해 나주신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남부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전통시장(무등시장·봉선시장)에서 소방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동부소방, 광주천 환경 가꾸기 정화 활동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관내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함께 자연보호를 실천하고자 광주천 환경 가꾸기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21일 광양시청 상수도과, 교통과, 택지과, 산단과와 2022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내장산백암사무소, 봄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지난 23일 관계기관 합동 봄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팝콘 사는 영화관 손님들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 제한이 해제된 25일 오후 광주 서구 한 대형 영화관을 찾은 손님들이 매점을 방문해 음식물을 사고 있다.

헤어진 연인 집 상습 침입...한달간 유치장 신세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집안일 해주겠다'며 스토킹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일을 하며 정신적 피해를 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서는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 개월에 걸쳐 담양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자택에 동의 없이 오가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으나,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 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건했다. A씨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접

근·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주변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집 등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최이슬기자

빛속 낚시하던 70대, 저수지 빠져 숨진 채 발견

경찰 "범죄 혐의점 없었다"...사고경위 조사중

밤사이 빛 속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38분께 광산구 도천동 한 저수지에서 A(7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서 가족들에게 "낚시를 하러 간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들은 밤 늦도록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미끼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서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신체에서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밭을 헐던 저수지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기자

거리두기 해제후 112신고 15%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경찰에 접수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1만1346건으로, 거리두기 해제 전 6개월간 일 평균 신고 건수인 9845건보다 1501건(15.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각종 모임 등 외부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 시간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질서유지와 중요범죄 건수가 각각 2298건(30.9%), 387건(24.8%)이 증가하는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풀린 뒤 회식과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에 관한 112신고는 보호조치로 처리된 사건이 7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취자(129건), 음주운전(146건)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신고도 증가했으나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는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슬비기자

청주 여중생 유족 '부실수사 비극'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상범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청주 여중생의 유족들이 부실 수사로 인한 비극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관련 피해 유족들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당 입증 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일반인이 부실 수사 과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 A양은 지난해 1월17일 친구 계부 B(5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의붓딸인 C양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선욱기자